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6, No. 140, pp.1-46
<https://doi.org/10.29212/mh.2026..140.1>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기획 1

6·25전쟁 시기 정훈국의 좌담회 기획과 ‘민간’의 전쟁 동원 논리: 후방 원호와 여성성 동원 서사를 중심으로

김지훈 |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연구원

- 목 차
1. 머리말
 2. 정훈국의 민간 동원 필요성과 전시 군·관·민 좌담회의 기획
 - 가. 정훈국 ‘군민협작’ 교리의 기원과 조직
 - 나. 정훈국 군·관·민 좌담회의 형식과 구성
 3. 좌담회에 나타난 전쟁 인식과 후방 지원의 논리
 - 가. 군에 대한 감사·원호 요청과 민간의 자기 각성 서사
 - 나. 모성의 국가화와 여성성의 동원
 4. 맺음말

초 록 이 글은 6·25전쟁 시기 국방부 정훈국이 기획·주최한 군·관·민 좌담회에 주목하여, 6·25전쟁을 총력전으로 이해하고 후방 민간에 대한 동원의 논리와 그 서사화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정훈국 기관 『국방』을 활용하였다.

정부 수립 및 한국군 창설 당시 좌우익 갈등에 기인하여 한국군은 정훈을 도입했다. 정훈은 중국 국민당 정공 개념을 참고한 것으로, 군대 내부의 사상통일은 물론 ‘군민협작의 교량’을 자임하며 민간 사회에 대한 사상 통제를 교리로 삼고 있었다. 6·25전쟁 이전부터 민간에 대한 통제와 동원이 실시되었으며 전쟁은 이를 본격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1951년 중반 전선이 교착하자 정훈국은 후방 국민의 전의를 동원·통제하기 위해 좌담회를 운영했다.

기실 좌담회라는 형식은 식민지 출판 자본의 성장과 대중 수요 확대에 따라 창안된 것이었지만, 중일전쟁 이래 일제의 여론 통제·동원 양식으로 활용되었다. 6·25전쟁이 총력전화하자 좌담회가 다시금 가동했다. 정훈 좌담회에서 ‘민간’은 관료·국회의원·언론인·여성단체·유족회 등 군과 밀착한 반관반민의 인력풀로 선별·편집되었다. 좌담회 서사의 목적은 국가 주도의 상명하달이 아니라 민간 발화의 외형을 연출하는 데 있었다. 전시 민간의 불만은 의도적으로 노출된 뒤 불가피했던 과거와 미래의 교훈으로 봉합되었다. 민간에 대한 전시 희생 감내와 원호의 요구는 군이 직접 발신하지 않고 언제나 민간의 각성과 자기비판의 형식으로 발화되었다. 동원의 요구가 민간의 자기서사로 전환될 때 강제는 자발적 협조의 외형을 획득하였다. 이러한 자기동원의 서사는 후방 여성에 대한 젠더 표상화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구현되었다. 어머니의 모성, 아내의 내조, 여학생의 위문편지는 젠더화된 동원 양식으로 정식화하였다. 반면, 군과 남성에 대한 직접 비판은 봉쇄되었고 후방의 구조적 폭력은 개인의 탈선으로 축소·은폐되었다.

요컨대 정훈국의 군·관·민 좌담회는 후방의 전쟁 지원 논리를 자기동원의 형식으로 정식화한 담론 장치였으며, 이는 총력전으로서의 6·25전쟁이 후방 사회를 전쟁에 결속시킨 방식이 물리적 동원 못지않게 담론의 차원에서 작동하였음을 보여준다.

주제어 : 6·25전쟁, 한국전쟁, 국방, 정훈, 정훈국, 좌담회, 종군작가단, 총력전, 민군관계

1. 머리말

6·25전쟁은 전선과 후방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규모의 전쟁이었다. 미국·소련에게 6·25전쟁은 규모나 전략적 측면에서 국지적인 제한전이였다. 그렇지만 남북한 당사국 입장에서 6·25전쟁은 전면적인 총력전 이상이었다. 무엇보다도 6·25전쟁은 현대전의 특징으로서 상대 진영의 이념과 가치를 훼손시키는 모든 행위를 마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총력전이였다.¹⁾ 총력전은 전투원·비전투원, 전선·후방의 구분을 두지 않는다. 이에 총력전 하에서는 후방의 민간인도 전쟁 수행의 주체 역할을 요구받는다. 특히 총력전 수행을 위한 후방의 인적·물적 자원 동원 역량 그리고 이를 감내하는 의지 역시 동원의 대상이 된다.²⁾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창부가 지적한바, 총력전으로서 6·25전쟁을 포착하고, 전선과 후방 사회와의 역학관계를 다룬 연구는 많지 않았다.³⁾

6·25전쟁 시기 민간 동원에 관한 기존 연구는 주로 전선에서 직접 이루어진 민간인 노동력의 동원과 조직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한국노무단 창설의 역사적 경위와 성격이 규명되었으며,⁴⁾ 보국대를 둘러싸고 태평양전쟁과 6·25전쟁 사이 민간인 노동 동원의 연속성이 조명되었다.⁵⁾ 다만 그 초점이 민간 노동력의 최전방

1) 온창일, 「6·25전쟁이 남긴 命題와 課題」, 『군사』 75, 2010, 2~4쪽.

2) 山室信一, 『複合戦争と総力戦の断層 — 日本にとっての第一次世界大戦』, 人文書院, 2011, 157~163쪽.

3) 강창부, 「6·25전쟁기 「전시생활개선법」과 후방의 '생활동원」, 『민족문화연구』 86, 2020, 327~328쪽.

4) 양영조, 「한국전쟁시 한국노무단(KSC)의 운용과 성격」, 『군사논단』 54, 2008; 나상철, 「6·25전쟁기 노무단의 구성과 활동」, 『군사』 115, 2020.

5) 나상철, 「한국전쟁기 보국대의 의미와 성격」, 『학림』 45, 2020.

동원이었던 까닭에, 6·25전쟁 당시 후방에 위치한 민간 사회와 군이 맺은 관계를 직접 다룬 것은 아니었다.

후방 민간 사회와 군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한국군 정훈(政訓)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방부 정훈국은 1948년 군의 사상 통일을 위해 설치되었다. 주목할 점은 한국군 정훈은 처음부터 군 내부에 국한하지 않고 민간 사회로 확장할 수 있는 논리와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⁶⁾ 정훈국이 6·25전쟁 이전부터 민간 사회를 향한 정훈 활동을 전개해 온 것은 이 때문이며, 이는 정훈이 군 내부의 사상 교육 기구인 동시에 군과 민간 사회를 잇는 담론적 매개 장치로 기획되었음을 보여준다.

정훈에 대한 그간의 연구를 통해 정훈 부대가 발간한 문예 텍스트에 대한 분석⁷⁾, 정훈장교와 종군작가의 사상 및 문학에 대한 규명이 이루어졌다.⁸⁾ 다만 텍스트와 인물에 집중한 접근으로는, 6·25전쟁 수행 과정에서 정훈을 매개로 형성된 민간의 전쟁 동원 논리를 해명하기 어려웠다. 요컨대 기존 연구는 전선에서의 물리적 동원과 정훈 활동을 각각 규명해 왔으나, 후방의 민간 사회가 어떠한 논리 속에서 전쟁에 호출되었는가, 곧 동원 논리의 형성 과정 자체는 아직 본격적인 분석의 대상이 되지 못한 것이다.

본고는 6·25전쟁기 군에 의한 민간의 전쟁 동원 논리를 정훈국 좌담회를 통해 살펴 보고자 한다. 좌담회는 1930년대 이래 대중문화의 유행 속에 공적 담론 양식으로 정착하였으며, 1940년대 아시

6) 김지훈, 「창군기 한국군 정훈의 도입 과정과 중국국민당 정공의 변용」, 『역사와 현실』 104, 2017, 341~350쪽.

7) 박태일, 「국방부 정훈매체 『국방』의 문예면 연구 - 한국전쟁기 정훈문학 연구 2」, 『어문논총』 55, 2011; 「전쟁기 국방부 정훈잡지 『국방』의 정훈문학」, 『근대서지』 7, 2013; 고낙일, 「6·25전쟁기 공군 정훈 연구 : 공군 발행 잡지 『코메트』를 중심으로」, 『동방학지』 211, 2025.

8) 박연희, 「종군 시문학의 (불)가능성-양명문과 김종문의 전후 시집을 중심으로」, 『구보학보』 28, 2021; 김지훈, 「김종문의 총력전 경험과 선전론 형성 -전간기로부터 냉전기까지」, 『상허학보』 65, 2022.

아·태평양전쟁 수행을 위한 관제적 민간 동원의 언로로 활용되었다.⁹⁾ 이러한 좌담회가 6·25전쟁 당시 국방부 정훈국 주도로 지속 실시된 점이 주목된다. 정훈 좌담회가 어떻게 기획되고 활용되었는지 그리고 그 담론의 효과는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정훈국 좌담회를 분석하기 위하여 6·25전쟁을 전후하여 발간된 정훈국 자료를 활용하고자 한다. 주요 자료는 정훈국 발간 월간지 『국방』이다. 『국방』에 정훈국이 주도한 군과 민간 간의 다양한 좌담회가 기록되어 있다. 그밖에 한국군 창설 직후 정훈국 최초의 지침서였던 『정공전범(초안)』, 정전 이후 정훈의 성과를 결산한 『정훈대계 I』 등의 정훈국 발간 문건을 활용하여 정훈의 활동과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정훈국의 민간 동원 필요성과 전시 군·관·민 좌담회의 기획

가. 정훈국 '군민합작' 교리의 기원과 조직

1948년 8월 한국 정부가 수립하고 한국군이 발족하였다. 한국군은 1946년 1월 이래 미군정에서 추진·창설된 조선국방경비대(이하 경비대)로부터 전환하였다. 경비대 조직 당시 미군정은 그 성격을 '경찰예비대'로 한정하고, 모병원칙으로 '정치적 불편부당성'을 표방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경비대는 식민지의 인적·물적 유산으로 말미암아 내부에 모순과 사상적 균열을 집적하고 있었

9) 신지영, 「신체적 담론공간을 둘러싼 사건성 - 1920년대 연설·강연회에서 1930년대 좌담會로 -」, 『상허학보』 27, 2009, 349~350쪽.

다. 이에 ‘창군’ 과정에서 경비대 및 그의 후신인 한국군은 사상적 균열을 노정하며 군 안팎에서 좌우익 충돌의 빈도와 규모를 더욱 점증하여 나갔다.

국방부장관 이범석은 군의 사상적 균열에 대응하여 정훈을 도입하였다. 이범석은 국방부에 정훈국(제2국)을 설립하고 송면수, 박영준 등을 통해 군 내에 정훈을 관철하고자 하였다. 특히 이들은 일제시기 만주에서 항일독립운동 경험, 중화민국 군관학교 수학, 해방 이후 조선민족청년단(족청) 활동 경험을 공통분모로 지니고 있었다. 이들은 항일독립운동 과정에서 중화민국 국민당 당군(黨軍) 개념에서 유래한 정공(政工), 즉 ‘정치공작’을 체득하였었는데, 정부 수립을 전후하여 사상적 균열을 겪고 있던 한국군에 이를 적용시켜 ‘정치훈련’을 의미하는 정훈을 창설한 것이었다.

정부 수립을 전후하여 미국의 지원을 받아 군대를 창설하고 있던 한국의 입장에서 초기 정훈의 개념과 성격은 그와 대칭에 있던 미국의 정훈(TI&E, Troop Information and Education) 및 공보(PI, Public Information) 개념과 상충할 수밖에 없었다. 미국 역시 TI&E 방법론의 반공적 ‘정치성’과 문민통제 원칙이 요구하는 ‘중립’ 사이에서 일정한 긴장을 안고 있었지만, 자유주의적 개인주의라는 미국적 가치에 대한 신봉을 통해 노골적인 프로파간다화를 경계하였다.¹⁰⁾ 각국 정훈의 개념과 명칭 혹은 방법론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국민개병제와 징병제 군대의 사상·정신교육이라는 점에서, 한국군의 정훈은 각국 군대가 공유하는 보편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다만 한국군 정훈은 역사적 특수성이 존재했다.

한국군은 정훈의 기원이 소련, 중화민국, 중화인민공화국 군대

10) Christopher S. DeRosa, *Political Indoctrination in the U.S. Army from World War II to the Vietnam War*,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2006, ch. 5(pp. 176-208).

(당군)의 정치부·당세포조직 편제에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아국은 일당독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한 북한의 당군과 대립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적 사정에 입각”하여 “정치훈련”을 실시할 수밖에 없다는 딜레마와 현실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¹¹⁾ 이미 정훈국(정치국) 구상 및 창설 과정에서 ‘사상에는 사상으로 대응한다’는 초대 국방부장관 이범석의 방침은 군사고문단장 로버츠(W. L. Roberts) 준장 등과 충돌하였거니와, 정치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 방식으로 인하여 양국의 정훈 교리는 상충하고 있었던 것이다.¹²⁾ 정훈국은 정훈의 필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¹³⁾

전쟁은 무엇이 하는가 전쟁은 사람이 한다. 그렇다면 사람을 지배 하는것은 무엇일가 그것은 오직 정신이다. 정신없는 인간은 허수아비일 것이다. 이러한 허수아비에게 여하한 최싹식핵무기는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되고보면 **총탄은 반드시 앞으로만 가는 것이라고 단언할수는 없을 것이다.** (강조: 인용자)

총탄이 ‘앞으로만 가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정훈국의 지적에서 나타나듯, 즉 정훈은 적의 무력이 국경 밖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군대나 사회 내부에 잠재할 수도 있다는 인식에서 기인한다. 중화민국 국민당의 정공이 북벌과 국공내전의 산물이었다면, 한국군의 정훈은 6·25전쟁 이전부터 군 내부에 감지되고 있던 ‘내전적 징후’에 대한 대응책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군의 정훈은 대내 장병을 대상으로 한 본연의 정훈 및 대적 심리전 기능과 별개로 민간에 대해 정훈을 실시했다는 특이성을 가지고 있었다. 달리 말하자면 한국군의 정훈

11) 「편제요령」, 『政工典範(草案)』, 국방부 육군본부 작전교육국, 1949.

12) 김지훈, 「창군기 한국군 정훈의 도입 과정과 중국국민당 정공의 변용」, 『역사와 현실』 104, 2017, 346~350쪽.

13) 『政訓大系 I』, A47쪽.

은 미군의 정훈에 비해 대민 발신이 공보(PI)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정치훈련’을 기획하였다는 점에서 특징적이었다. 한국군 정훈 최초의 교재인 『政工典範(草案)』은 국민당군의 政工 교재를 한국의 상황에 적용시키려던 과도적 성격을 드러낸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양국의 교재에 공히 나타나는데, 정훈은 군대와 민간 사회 사이에서 “군민협작의 교량”으로 설정되었으며, 지역의 행정기관·사회단체·공공기관 등과의 협력을 매개하는 역할을 자임하고 있었다는 것이다.¹⁴⁾

이러한 계획에 따라 6·25전쟁 이전부터 국방부 정훈국은 독자적인 정훈 운영을 모색하며 대민공작을 중시하여 왔다. 가장 대표적인 활동은 민간을 대상으로 삼은 별도 정훈부대 운용이라 할 수 있다. 최초의 민간 대상 정훈부대는 정훈공작대였다. 정훈공작대는 여순사건을 계기로 국방부 정훈국 직할 부대로 편성되었다. 정훈공작대는 지리산과 태백산 등지에서 활동하며 “폭도준동지구, 주민의 사상순화” 및 “사병의 사기를 양양”을 목표하였다.¹⁵⁾

한편 6·25전쟁 중 한국군은 38선 이북으로 진출하며 북한 지역을 점령하고 한국의 영토로 ‘수복’하고자 하였다. 이에 발맞추어 국방부 정훈국은 1950년 11월 24일 정훈대대를 창설하고 이를 통해 북한 점령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사상공작을 준비하였다.¹⁶⁾ 그러나 북한 점령 지역에 대한 한국 정부의 통치계획은 유엔 등과의 마찰로 갈등을 빚어 실현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정훈대대는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의 일선부대 및 후방부대로 분산배치되어 군 내부 정훈 및 민간사회를 대상으로 정훈을 실시하였다.¹⁷⁾

14) 「제10조 政工과 民衆」, 『政工典範(草案)』, 국방부 육군본부 작전교육국, 1949, 3쪽; 김지훈, 위의 글, 364~365쪽.

15) 『政訓大系 I』, A28쪽.

16) 『政訓大系 I』, A35쪽.

17) 『政訓大系 I』, A41~A42쪽.

위와 같은 대민 정훈 부대 편성과 더불어 국방부 정훈국 주도로 민간 사회를 조직하는 '정훈망(政訓網)' 운용이 기획되었다. 정훈망 역시 6·25전쟁 이전부터 실시되었다. 제2사단 제6연대에서 군수, 서장, 유지 정훈요원으로 선발·교육하여 '정훈세포망(政訓細胞網)'을 조직하여 공비 소탕 역할을 부여한 것이 최초였다.¹⁸⁾

6·25전쟁이 발발하자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는 임시수도 부산으로 이전하였다. 후방에서 전쟁 수행을 목적으로 정훈망이 다시 설치되었다. 정훈망은 국방부 정훈국 부산분실(釜山分室)에서 운영되었다. 정훈국 부산분실은 1950년 12월 31일 전시 임시수도 부산에서 설치되었으며,¹⁹⁾ 1951년 2월 초 정훈망을 조직하여 좌담회를 개최하거나 위문금 등을 모집하였다.²⁰⁾ 정훈국 부산분실이 "군사극비"로 기획한 문건 『國防部 政訓局 慶尙南道 戰時 政訓網 組織 企劃書』에 따르면, '경상도전시정훈망'을 조직하여 경상도 지역의 "전시 계몽 및 국민총력"을 위한 "국민전시조직"을 목표하였다.²¹⁾ 정훈국이 경상남도에 정훈망 조직을 통해 주민과 군대를 결합하려 하였던 이유는 경부선 및 남해선 철도의 수비와 지리산의 빨치산을 대상으로 한 소탕작전을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²²⁾ 다만 국방부 정훈국 부산분실의 정훈망 운용은 부산정치파동을 앞둔 이승만 정권의 대민 동원 기획의 일환으로도 파악 가능하다.²³⁾

요컨대 한국군 정훈은 군 내부 사상 통제 및 정치훈련 기능을 넘어, 군이 직접 민간 민간의 사상·정치 영역으로 진출할 수 있

18) 『政訓大系 I』, A28쪽.

19) 「言論自由 育性」, 『부산일보』 1951년 1월 4일.

20) 「完璧의 臨戰態勢-釜山市 政訓網 組織」, 『부산일보』 1951년 2월 1일; 「釜山 政訓網의 첫 事業」, 『부산일보』 1951년 2월 24일.

21) 『國防部 政訓局 慶尙南道 戰時 政訓網 組織 企劃書』, 1~2 쪽.

22) 『國防部 政訓局 慶尙南道 戰時 政訓網 組織 企劃書』, 13~16 쪽.

23) 김지훈, 앞의 글(2017), 49쪽.

는 가능성을 6·25전쟁 이전부터 열어두고 있었다. 한국군 정훈은 군대가 사회와 분리된 무력기구가 아니라 사회 내부의 사상 균열을 정지·교정하는 정치적 주체로 자임하였다는 점에서 역사적 기원과 특징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6·25전쟁은 이러한 구상이 본격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전쟁 수행을 위해 군 정훈 주도로 민간의 여론을 관리하고 포섭·동원할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나. 정훈국 군·관·민 좌담회의 형식과 구성

국방부 정훈국은 창설 당시부터 군 내부는 물론 외부 민간을 향해 정훈을 실시할 것을 교리로 삼고 있었다. 정훈국이 정리한 “6·25 이전의 정훈업무의 개요”에 따르면 초기의 정훈 활동은 신문, 주보, 월간지, 화보집, 육탄10용사전 간행물 발간 사업과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집회 및 일방향적 전시행사가 주를 이루었다. 가령 북한 월남 군인 환영대회나 노획품 전시회, 전국 학교 대상 포스터 전람회, 전몰군인 합동추도회, 영화 ‘성벽을 뚫고’ 제작 등이 대표적 예시였다.²⁴⁾

물론 6·25전쟁 이전에도 좌담회가 개최되었다. 가령 1949년 11월 10일 개최된 좌담회 같은 경우 일제시기 특별지원병·징병·징용을 겪고 해방 후 소련으로 끌려 갔다 돌아온 ‘억류귀환동포’ 15명이 주가 되었다. 이러한 좌담회는 반공과 반소 이데올로기를 고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린 것이었다.²⁵⁾

이와 더불어 6·25전쟁 이전에도 여순사건의 여파로 좌익 유격대가 활동하던 지리산 및 태백산 지역을 대상으로 정훈공작대가 조직되어 ‘공비’ 및 지역민을 대상으로 작전을 전개하였다. 다만

24) 『정훈대계 I』, A28~29쪽.

25) 노영기, 「여순사건 이후 군의 정훈 활동과 그 의미」, 『사림』 61, 수선사학회, 2017, 201쪽.

정훈공작대(대장: 육군 중령 박영준)의 활동은 “사상순화”로 상징되는 초기 정훈 업무의 ‘본령’에 가까운 것이었고,²⁶⁾ 좌담회의 형식이나 월간지 『국방』 게재를 통해 전후방을 아우르는 담론의 형성을 목표로 한 활동은 아니었다.

정훈국이 좌담회라는 형식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6·25전쟁 이후부터, 정확히는 38선 부근에서 전선이 고착화하고 전후방의 구분이 뚜렷해진 1951년부터였다. 1951년 봄부터 한국 정부의 소망과는 달리 UN군은 정전 가능성을 탐색하는 가운데 제한적인 공격만을 가하고 있었으며, 공산군의 수차례에 걸친 대규모 공세는 저지되었다. 6월에 이르러서는 전선이 상대적으로 안정되었으며, 휴전회담이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1951년 국방부 정훈국 산하 전사편찬회가 발간한 『한국전란1년지』에 따르면 6·25전쟁과 이로 인한 민간 대상 정훈공작의 필요성이 다음과 같이 설명되었다.²⁷⁾

정훈업무가 군인대상에만 끝나는것은 결코 아니니 첫째 현대전은 총력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한 국가가 소유한 인적 물적의 총력을 경주하여 싸우는것이 현대전의 특징이라면 현대전은 일선에 있는 군인만의 싸움이 아니라는것도 짐작하여야 된다. 일선장병이 아모리 이겼다 하여도 그 일선을 지원하는 **후방이 붕괴되고 만다면 결국 패전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은 제1차대전의 독일이 증명하고 있지않으나?**

이러한 의미에서 현대전의 기본성격상 **일반 국민의 동향은 전승을 좌우하는 불가결의 요소**이니 이때문에 군의 정훈업무도 일반국민의 무형적인 전투요소에 대하여 무관심할수는 도저히 없는것이다. 여기에 이른바 **대외(대민간)정훈공작이 필연하게 되는 것이니 국민상하의 군에 대한 지원여하와 그들 자신의 사기 및 투지, 적개심, 단결력등**

26) 『정훈대계 I』, A28~29쪽.

27) 『한국전란1년지』, 국방부 정훈국 전사편찬회, 1951, A50쪽.

등은 전반적인 전투력과 직결하고 있는 때문이다. 군사에 대한 보도 선전을 정훈업무에 포함시킨 이유도 이에있는 것이다. (강조: 인용자)

정훈국은 6·25전쟁이 현대전이자 총력전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까닭에 전쟁은 전선에 있는 군인만의 싸움이 아니며 후방의 일반 국민이 지닌 사기 등의 무형적 전투요소도 전쟁 승리를 위한 전투력과 직결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사례가 환기되고 있듯이 전쟁의 장기화는 국민의 전의 상실과 종국적으로는 패전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유태인의 ‘배후중상’이라는 집단기억이나 좌익의 독일 혁명이 그 위협으로 여겨졌다. 즉 총력전으로 전개되는 6·25전쟁으로 인해 정훈에 의한 국민의 사기를 관리하고 동원할 필요성이 명확해진 것이었다. 다만 이러한 정훈 활동은 전선의 진퇴가 혼란스러웠던 전쟁 초반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전선이 안정된 시기에 가능했다. 즉 전선이 안정되어야 전방과 후방의 구분이 가능했던 것이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1951년 중반 전선이 안정되면서 부터였다. 정부의 이동에 따라 정훈국도 대구를 거쳐 부산에 자리잡았다. 정훈국의 표현에 따르자면 “전시체제는 준평시체제로 대체할 필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정훈국은 편제를 정비하고 육·해·공 3군의 정훈 업무의 체계화를 갖추어 나갔다. 정훈국 편제를 정비하고, 「정훈업무규정」을 제정하였다. 또한 전쟁 발발 이후 최초로 국방부 정훈국이 주도하여 ‘3군정훈감회의’를 부산에서 개최하여 그간의 정훈 업무를 검토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였다. 이에 『정훈교정』 16종 등 각종 교재를 발행하고 뼈라와 포스터 등을 배포하는 한편 종군 작가단 및 화가단을 동원하여 “전선후방교류를 강화”하였다.²⁸⁾

28) 『정훈대계 I』, A47~53쪽.

1951년 중반 정훈국이 정훈을 쇄신·강화하던 국면에서 주목해 볼 수 있는 텍스트는 국방부 정훈국 발간 월간지 『국방』이다. 『국방』의 서지사항을 분석한 박태일에 따르면, 『국방』은 1949년 1월에 창간하였다. 창간사에 따르면 “국방언론의 선봉”을 표방하고 “국군 지식의 계발”, “장병의 교양과 정신 작흥” 그리고 “군인의 진로를 밝히는 거화가 되고 지침과 묵탁”이 될 것을 표방하였다고 한다. 그러다가 1950년 6·25전쟁 발발을 계기로 『국방』 발간은 중단되었다가 1950년 12월 피란지 대구에서 ‘속간 1호’를 냈다. 그리고 1952년 5월 속간 13호부터는 대구에서 부산으로 옮겨 출판을 이어 나갔다. 『국방』이 앞서 낸 통권 호수의 누적을 버리고 속간 1호부터 새로 매긴 것은 『국방』을 발간하는 정훈국의 목표와 각오가 달라진 것이라고 할 수 있었다. 박태일은 이러한 변화가 일선장병에 대한 사기양양과 총후 국민에 대한 전시 사상계몽의 목적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방』은 정훈국의 중점을 둔 사업 중 하나로 파급력 역시 컸다. 『국방』은 전쟁 시기에만 25호를 냈다. 이는 동시기 육군중군작가단의 기관지 발간 등과 비교했을 때 두 배 이상의 시·소설·수필·보고·평론 등이 실린 셈이며, 펴낸 양도 배가 넘었다.²⁹⁾

장병 교양지를 표방한만큼 『국방』 지면에는 전문적인 군사 지식과 더불어 문예가 중시되었다. 이러한 까닭에 『국방』지는 현역 군인이나 종군작가가 쓴 다양한 형태의 글이 실리고 있었다. 『국방』에 실린 글 중 눈길을 끄는 것은 좌담회 코너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좌담회라는 형식과 그 특성이다. 한국 역사에서 좌담회가 등장한 것은 1920년대 대중문화의 유행과 일본 출판 자본주의의 조선 진출에 따라 이루어졌다. 좌담회는 공적 담론

29) 박태일, 「국방부 정훈매체 『국방』의 문예면 연구 - 한국전쟁기 정훈문화 연구·2 -」, 『어문론총』 55, 한국문학언어학회, 2011, 254~256쪽.

부터 사적 가십까지 대중이 관심을 가진 법한 주제로 편집하여 전파되는 담론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대중의 흥미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좌담회에는 당대의 명사나 유명인, ‘신여성’ 등이 참여하여 토론의 형식을 띠고 진행되었다. 다만 토론의 형식을 띠었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좌담회 내에서 참여자의 발화는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으로서, 결코 토론처럼 찬반과 공수를 오가는 열띤 논쟁이 벌어질 수 없었다. 식민지 통치권력의 검열은 적극적인 논쟁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³⁰⁾

근대 출판자본과 대중문화에 의해 유행한 좌담회라는 형식은 중일전쟁 이후 좌담회는 일제의 총력전 수행을 위한 도구로 이용되었다. 전시 동원 이전부터 조선에서 좌담회는 출판자본의 기획에 따라 기획·편집된 형태였는데, 여기에 식민지 통치권력의 검열이 항상 시행되고 있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좌담회 참여자의 언설은 단순한 발언이 아니라 일종의 ‘자기동원’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는데,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논리구조가 더욱 강요·심화되었다. 총력전이 전개됨에 따라 좌담회에서 벌어지는 동원 혹은 전향의 논리는 민간의 논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정 당국이나 군부가 직접 좌담회에 가담하여 계몽과 위계로서 좌담회를 이끌어갔다. 이러한 의미에서 전시 좌담회는 통치 권력을 강화하고 전쟁 동원 담론을 생산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었다.³¹⁾

이러한 전사와 성격에 힘입어 좌담회라는 형식은 6·25전쟁 발발 이후에 후방 동원 담론을 유통하는 역할을 부여받았다. 6·25전쟁 중에 정훈국이 발간한 『국방』 중 현재 확인 가능한 것은 1951년 5월호부터 1953년 6·7월호 합병호까지 총 20개 호 분량

30) 조미숙, 「일제 강점기 매체에 게재된 좌담회 연구 - 잡지의 만주 담론을 중심으로 -」, 『겨레어문학』 43, 겨레어문학회, 2009, 207쪽.

31) 신지영, 『한국 근대의 언설·좌담회 연구 - 신체적 담론공간의 형성과 변화 -』, 연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09, IV 참조.

에 불과하다. 전쟁 중 소실 혹은 전국 대학 도서관에 희귀본 등으로 산재되어 있다. 이 20개 호 중 정훈국 주도하에 관 또는 민간 인사를 초청하여 좌담회가 기획된 것은 8개 호 분량으로 별첨의 표와 같다.³²⁾ 이 8개 호 좌담회의 형태와 내용을 분석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6·25전쟁 시기 정훈국 좌담회는 전선과 후방에서 개최되었다. 전선의 좌담회는 강원도의 일선 부대나 군단사령부에 민간 단체가 시찰을 나가 이루어졌다. 후방의 좌담회는 주로 전시수도와 국방부 정훈국이 위치한 부산 등지에서 진행되었으며, 주로 경상도 지역의 기관이나 단체가 참여했다. 국방부 정훈국이 좌담회를 기획했기에 좌담회를 이끈 이는 정훈장교였다. 좌담회의 진행과 발언을 통제한 사회자는 모두 정훈장교가 담당했다. 구체적인 예시로는 정훈국 편집과장 원갑연 소령(『국방』 4, 1951.6), 제7사단 정훈부장 보좌관 이강천 중위(『국방』 16, 1952.8), 제2군단 정훈부장 윤봉희 소령(『국방』 17, 1952.9), 남부지구경비사령부 정훈부장 송성룡 소령(『국방』 23, 1953.4) 등이 있다. 좌담회의 편집 역시 잡지 『국방』을 편찬한 국방부 정훈국이 담당했다.

좌담회의 규모와 기획에 따라 그 참여 구성이 달라졌지만, 군 측 참여 인원을 계급으로 보자면, 육군총참모장 대장 백선엽부터 제7사단 제5연대 정일택 일병 등 사병까지 망라하고 있다. 참여 인원 계급의 절반은 영관급 좌담회에 참여하는 최다 직책은 정훈 관련 보직자였으며, 이외로는 참모 및 지휘관 직책이 뒤를 이었다. 영관급 장교가 등장하는 군인 계급의 절반을 점하였다. 좌담회 최다 참여자는 육군본부 정훈감 박영준 준장이었다. 한편 좌담회 명단에 든 사병도 현장에서 형식상 발언 기회를 얻었을 테지

32) 국방부 정훈국 편, 『국방』 3호(1951.5) · 4호(1951.6) · 16호(1952.8) · 17호(1952.9) · 18호(1952.10) · 21호(1953.1 · 2 합병호) · 22호(1953.3) · 23호(1953.4)를 분석하였다.

만, 그의 발언이 활자화되어 『국방』지에 실린 경우는 없었다.

좌담회에 참여한 민간의 영역으로는 대개 관·민으로 대별된다. 즉 전자의 영역으로는 국회, 내무부, 경남도청·경북도청·부산·대구시 공무원, 법조인, 경찰 등이었다. 그리고 후자의 영역은 언론사, 통신사, 종군기자, 종군작가단, 여성단체, 유족회 등 역시 군과 밀착한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공인된 인력풀을 두고 정훈 좌담회는 매 호마다 ‘민’의 유형을 바꾸어가며, 이들을 호명하여 기획되었다. 특히 1952년 9.28 수도 서울 탈환 기념 및 3군합동추도식 이후에 진행된 ‘제2차 육해공군 합동 추도식 유가족 좌담회’의 경우 중앙방송국 녹음을 통해 전국으로 전파되기까지 하였다.³³⁾

6·25전쟁 중 『국방』의 좌담회는 국방부 정훈국이 표방한 ‘군민협작의 교량’ 역할을 수행하는 코너였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좌담회 참여자는 정계·행정·사법·경찰·언론·문화계를 망라하였다. 이들은 대개 전시 동원기구의 운영자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전시 정훈국의 군·관·민 좌담회는 동원기구의 운영자가 스스로 동원의 논리를 발화하는 자리였다고 할 수 있다. 정훈국이 기획한 좌담회의 주제와 인적 구성은 『국방』지를 매개하여 군이 조형한 전시 후방 민간 동원의 논리가 행정 계통과 기성 언론을 통해 그대로 확산·유통될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

더욱이 전시 신문은 군의 검열 아래 놓여 있었고 군 관련 보도는 대체로 군이 생산·배포한 보도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으므로, 실제 신문 기사의 양상 역시 좌담회가 마련한 논리 위에서 전개되었다. 나아가 좌담 자체가 정훈장교의 주도로 진행된 만큼 군 내부의 논리는 정훈망을 따라 일선 부대로 확산될 수 있었으며, 앞서 본 유가족 좌담회의 중앙방송국 녹음 방송에서 드러나듯 전

33) 「제2차 육해공군 합동 추도식 유가족좌담회녹음」, 국방부정훈국, 『국방』 18, 1952.10, 71쪽.

시 라디오는 그 유통 범위를 전국 단위로 확장하였다.

물론 권위주의적 체제의 대민 선전은 대개 시민들에게 불신되거나 무시되곤 한다. 그렇지만 선전의 효용은 친체제적 가치를 주입하는 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선전은 사회 통제와 정치 질서 유지 역량의 과시에 있다. 선전을 마주한 시민이 불신에도 불구하고 순응을 '시연'하는 그 행위 자체가 효과이다. 이러한 점에서 선전은 선전 그 자체 보다 일종의 규율로서 작동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국방』이 매 호 '민'의 유형을 바꾸어 가며 각계 인사를 호명한 것은 각종 반관반민 단체가 군의 논리에 순응함을 공개적으로 시연하는 자리였으며, 좌담회는 동원과 순응 혹은 갈등과 봉합의 담론 구조를 반복적으로 유통하여 전시 사회를 규율하는 장치로 기능하였다.

3. 좌담회에 나타난 전쟁 인식과 후방 지원의 논리

가. 군에 대한 감사·원호 요청과 민간의 자기 각성 서사

앞서 살펴보았듯이 6·25전쟁 이전부터 국방부 정훈국의 활동 범위는 군 안팎을 아우르는 것이었고, 민간 영역에 대한 직접적인 정치훈련을 시도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정훈국 창설 이래 6·25전쟁의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정훈의 방법론은 도심에서 개최하는 단발성 행사나 좌의 유격대 출몰 지역민을 대상으로 삼은 지역 단위 사상·심리전에 치중한 것이었다. 1951년 중반에 이르러서야 정훈국은 전시 편제를 정비하고 육·해·공 3군의 정훈 업무의 체계화를 갖추어 나가기 시작했다.³⁴⁾ 정훈국 발간 잡지 『국방』이 속

34) 『정훈대계 I』, A47~51쪽.

간 2호를 내며 안착한 것도 이때부터였다.³⁵⁾

이 무렵 대구를 기점으로 전후방의 구분이 뚜렷해지면서, 정훈국은 대민 정훈의 방법도 변화하기 시작했다. 정훈국은 좌담회라는 형식을 적극 활용하며 후방의 국민을 호명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모습을 잘 드러내는 장면은 『국방』 속간 4호에 기획된 1951년 6월 25일 개최 ‘사변1주년 군경관민 좌담회’이다. 이 좌담회는 “전란발생 1주년을 맞이하여 군경관민 사계명사들의 폐부에서 우러나는 그 경험담과 고귀한 지론”³⁶⁾을 청취할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군으로는 육해공군총사령관 정일권 및 해군의 손원일, 공군의 김정렬 총참모장, 민간으로는 국회의원 이재학, 내무부 치안국장 김태선, 천주교 대구교구장 주교 최덕홍, 부산시장 김주학, 대구시장 허억, 종군문인 마해송, 소설가 최정희 등이 참여하였다. 좌담회의 시작은 전쟁 초기의 혼란과 피란 당시 정부 역할의 부재에 대한 좌담회 참석자 간의 연속된 대화로 시작된다. 그 내용 중 일부를 직접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이재학 의원: 나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대한민국은 운이 좋았습니다. 사변돌발직후에 「맥아더」 원수의 용단과 그리고 「유·엔」 안보이사회에서 「쏘련」의 불참으로 거부권의 행사 없이 한국원조가 실현된 사실 또 국회의원과 정부직원의 대부분이 서울로부터 무사히 탈출한 사실 등 지금 생각해도 대한민국의 천운이랄 밖에 없습니다.

최정희 여사: 뭐가 운이 좋았어요 — 우리 민간인은 어디 가야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정부요, 국회요, 군이요, (중략) 우리는 아이들을 다리고 그 밀물 같은 피란민들 속을 — 아무의 지지도 없이 그저 모두 어떻게 하면 살까? 어떻게 하면 살아볼까? 하는 일념에서

35) 『정훈대계 I』, A37쪽.

36) 「사변1주년 군경관민 좌담회」, 국방부정훈국, 『국방』 4, 1951.06, 48쪽.

해했습니다. 그후 벌써 1년이 지났다니 참말 꿈만 같습니다.³⁷⁾

민주국민당 소속 국회의원 이재학은 6·25전쟁 직후는 “천운”의 연속이었다며 미국과 유엔의 신속한 참전과 국회의원 및 정부 직원의 서울 탈출을 서사화하였다. 그런데 이에 대해 ‘여류소설가’ 최정희는 이재학의 언설에 강하게 반박하였다. 그는 전쟁 발발 직후 정부, 국회, 군의 부재 상황에서 피란민들의 방황과 생존의 기로에 섰던 경험을 강변하였다. 국방부 정훈국의 좌담회 편집을 감안하여 보자면 두 사람의 논박은, 전자 국회의원 이재학이 국가 측의 공식 서사를 대변한다면, 후자 여성 문인 최정희를 매개한 ‘민간’의 반론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이재학과 최정희의 이력이다. 일제시기 이재학은 내무부 관료 및 군수로, 최정희는 조선임전보국단 문인 등으로 친일협력을 했었다. 특히 최정희의 경우 1930년대 근우회와 카프(KAPF: 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가동맹)를 비롯한 여성운동 및 사회주의운동으로 실형을 살기도 하였는데, 이후 전향하여 일제의 아시아·태평양전쟁 강제동원을 위한 언론활동에 적극 협조한 이력이 있었다.³⁸⁾ 이러한 까닭에 최정희에게 ‘총후’의 역할을 강조하는 좌담회는 익숙한 형식이었다. 더욱이 최정희는 6·25전쟁 초기 한강을 ‘도강’하지 못하고 서울에 ‘잔류’했고 북한군 점령 당시 문학가동맹에 출입했다. 결과적으로 최정희는 1950년 9월 한국군의 서울 수복 이후 ‘부역자심사’를 거치며 구류 후 방면되었지만, 그에게는 ‘부역작가’, ‘잔류작가’라는 낙인이 작동했다.³⁹⁾

37) 「사변1주년 군경관민 좌담회」, 국방부정훈국, 『국방』 4, 1951.06, 48~49쪽.

38) 1930년대 중반 카프(KAPF: 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가동맹) 활동으로 투옥되었다가, 1940년대 들어 조선임전보국단을 위시하여 일제의 전쟁협력에 찬동. 당대 다수의 좌담회에 참여하여 ‘신체제’ 하에서 총후의 여성, 부인 역할을 강론한 대표적 언론인이었다(『친일인명사전』 모바일판).

39) 공임순, 「최정희의 해방 전/후와 ‘부역’의 젠더 정치」, 『여성문학연구』 46, 2019, 26쪽.

최정희의 문필 전략은 정치에 무지한 ‘여성성’의 과잉을 통해 책임을 회피하고 체제의 폭력 앞에 무력한 자신을 은폐·보호하려는 전략을 취하였다.⁴⁰⁾ 구체적으로는 피난민의 자기 고백 서사를 통해 생존을 위한 ‘부역’의 불가피성을 역설하고 자신을 희생자로 표방하거나, 일제시기 언설하였던 ‘군국의 어머니’와 같이 아들을 전선으로 내보내는 모성의 국가화 서사를 통해 반공과 국가에 대한 헌신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타났다.⁴¹⁾

‘사변1주년 군경관민 좌담회’에서 관(이재학), 민(최정희) 두 집단의 갈등은 이내 군에 의해서 봉합된다. 다음 대화를 이어 나간 육군참모차장 유재홍 소장은 “사변초의 혼란했던 것은 실책이라는 것보다도 그 당시에 환경으로서는 불가피한 일이었으며 그 경험을 살리면 앞으로의 훌륭한 교훈이 될 것이고 또 되었던 것입니다”라고 답하였다. 그의 발화를 통해 정확히 1년전 개전 직후 상황은 “불가피”했던 과거로 봉인되고, 미래를 위한 “교훈”으로 회수된다. 이어서 천주교 대구교구장 최덕홍 주교는 “사변 초기에는 민중들이 한결 같이 군경을 원망했었습니다 … 그러나 지금은 오직 승전을 위하여 거족적으로 돌진할 뿐 아무런 불만도 의심도 없습니다”라며 대화를 봉합하였다.⁴²⁾ 그리고 좌담은 다음과 같이 마무리된다.

박영준 대령: 제가 일반국민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전쟁이 오래 계속되면 그럴수록 困苦도 가증될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최후의 오분까지 참아야 합니다. 또 현대전은 전투원과 비전투원의 구분을 구별을 점점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총든 군인과 후방국민이 화목 단결해서 고락을 함께하고 전쟁도 같이 합니다.

최정희 여사: 싸움이란 군인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뒤에 남아 있

40) 유승환, 「잔류파와 도강파의 내적 논리와 ‘공모의 공간’으로서의 고백적 글쓰기」, 『우리어문연구』 71, 2021, 286~287쪽.

41) 공임순, 앞의 글, 28~29쪽.

42) 「사변1주년 군경관민 좌담회」, 국방부정훈국, 『국방』 4, 1951.06, 49쪽.

는 사람들도 일선에 나가 싸우는 장병들과 같은 마음으로 싸우고 있다는 것을 군인도 알아야 하고 일반 국민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을 인식함으로 써만 자신에게 부과된 책무를 항상 잊지 않을 것입니다.

좌담회의 서사 구조는 민간 일각의 ‘여류소설가’에 의해 제기된 정부와 군에 대한 불신은 다시 군과 권위 있는 민간에 의해 자발적으로 종결되는 것으로 서사화되었다. 특히 중화민국 국민혁명군·대한민국임시정부 광복군 출신이자 족청계로 한국군 정훈의 입안자 중 한 사람이었던 육군본부정훈감 육군대령 박영준의 발언이 주목된다. 박영준은 전투원과 비전투원의 구분이 없는 현대전, 즉 총력전의 개념을 언설하며 전방과 후방의 단결을 강조하였다. 박영준의 말을 이어 받은 최정희는 전쟁에 대한 의구심을 지우고 전쟁 수행의 책임감을 일반 국민에게 당부하는 것으로 좌담회를 마쳤다.

즉 정훈국 좌담회의 서술 전략은 국가와 민간 간의 긴장 관계가 의도적으로 연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를 통해 정훈국 좌담회는 관제 언론이 아닌 ‘민간’ 발화의 외형을 연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발화 주체 간의 의견 차이를 내어 보임으로써 좌담회는 국가 주도의 일률적인 상명하달식의 논의가 아닌, 서사의 긴장감과 흡입력을 가지게 된다. 특히 군 정훈 관계자 주도의 논의와 해석을 통해 군이 민과 관 사이의 균열을 호명하고 봉합하는 주체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연출하고자 한 것이다.

한편 1951년 봄부터 전선이 38도선 인근에서 일진일퇴하였다. 한국군과 유엔군은 공산군의 공세를 방어하며 전쟁이 장기화하였다. 자연히 전쟁을 부양하는 후방 국민의 부담도 누적되어 갔다. 이에 따라 군과 민간 간의 다양한 갈등이 일었다. 예를 들어 ‘가짜

헌병'이 민간에 출현하여 위세를 부린다던가,⁴³⁾ 군 주둔지 인근 주민들에게 백미, 닭, 돼지 등의 지원을 과도하게 부담시키는 “민폐”가 지적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후방에서는 계엄 해제 이후에도 군 합동수사본부가 “기관화”하여 법률적 근거 없이 헌병이 아닌 일반 장병에 의해 이른바 ‘부역자’ 등 민간인에 대한 체포 및 구금이 자행되었고, “광범한 사상문제 처리를 군 기관이 주도한다는 것은 횡포한 독단”임이 지적되었다.⁴⁴⁾ 이러한 상황 속에 1951년 2월 거창민간인학살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정훈국은 “전세의 일시적 불리에 따르는 민심동요의 가능성 등의 제반정세에 비추어 군관민 거국일치의 총력전 태세확립이 요청”된다며 대민 정훈 활동에 더욱 주의를 기울였다.⁴⁵⁾ 다시 한번 ‘사변1주년 군경관민 좌담회’를 살펴본다면, 육해공군합동헌병대장 예관수 대령의 다음과 같은 언설을 통해 민간의 전쟁 수행 감내를 역설하였다.

우리는 좀더 일선장병에 감사운동을 전개하여야 할것입니다. 따라서 일반국민에게 요망하는 것은 한 집안에 자식이 셋만 있어도 그 중에 망나니가 나와 집안을 망치는 일이 있는데 하물며 십수만이나 있는 국군 가운데 어떤 사람이 없겠습니까? 나쁜 일하는 것도 우리의 자식이요 형제입니다. 후방의 군인이 술을 먹고 지탈쓰는 것은 철저히 단속해야 하지만 일선에서 어찌다가 후방에 오게되어 한잔 먹다가 좀 실수를 하더라도 우리는 그 꼴을 책하기 전에 그들의 기분을 이해하여야하고 그 사기를 도와주어야 합니다. 헌병의 입장으로 말하기 곤란하지만 목숨 바치고 싸우는 사람이 위로를 받아야 합

43) 「假憲兵告發하라: 張司令官 軍風紀團束을 言明」, 『동아일보』 1950년 10월 24일 2면.

44) 「恤兵을 爲해 過度한 民弊 『合搜等非法機關을 整理하라』」, 『동아일보』 1951년 4월 27일 2면.

45) 『정훈대계 I』, A41쪽.

니까? 후방에서 양복이나 입고 다니는 관리나 모리배가 요정에 다녀야 합니까? 우리 국민은 과거 일본놈들도 그 군대에 얼마나 감사운동을 하고 요정뿐만 아니라 위안소까지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 생각하고 일선 장병을 위로하는 동시에 국군의 비행만 말 말고 좀더 美點을 발견하여 용서하여주고 감사할줄 아는 국민이 되어야 할것입니다. 이말은 오해될지도 모르나 저로서는 솔직한 고백입니다.⁴⁶⁾

예관수는 헌병이란 직책상 군의 기강을 단속하는 위치에서 발화하고 있지만, 그 발화의 방향은 군 장병이 아니라 후방 민간을 대상으로 삼고 있었다. 예관수는 후방에서 벌어지는 군 기강의 해이와 대민 충돌 문제에 대해 민간 일반의 이해와 사기 진작의 분담을 요구하고 있다. 예관수의 지적은 곧바로 후방의 민간 영역에 있는 ‘양복’입고 ‘요정’에 출입하는 관리나 모리배에 대한 대조적 비판으로 이어진다. 심지어 국민에게 군에 대한 감사를 촉구하기 위한 사례를 열거하며, 일제시기 강제동원되었던 “감사운동”, “위안소” 등을 거론하며, 국민들의 군에 대한 “용서”와 “감사” 그리고 “위로”를 강조하고 있다.

1951년 7월에 들어 전선이 38도선 인근에서 교착한 채 치열한 고지전이 전개되었다. 이와 동시에 정전회담이 전개되며 전쟁이 머지 않아 끝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사회 전반에 조성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후방에는 ‘사치’스러운 생활이 등장하며 전선과 후방의 분위기는 괴리되기 시작했다. 이 무렵 국회와 정부는 ‘전선과 후방의 일체화’를 기하고 후방의 총력전 감내 의지를 높이기 위해 「전시국민생활개선법」을 내세웠고, 후방 국민의 생활을 통제·동원해나가기 시작했다.⁴⁷⁾

군의 입장에서 민간의 각성을 촉구하는 일성은 1953년의 좌담

46) 「사변1주년 군경관민 좌담회」, 국방부정훈국, 『국방』 4, 1951.06, 53쪽.

47) 강창부, 앞의 글, 332~336쪽.

회에서도 동일한 구조로 반복되었다. 1953년초 곽상훈 등 국회의
원 9명과 정국은(鄭國殷)을 비롯한 통신사 기자 5명 등이 후방훈
련소 및 동부전선을 시찰하고 돌아와 정훈국 좌담회에 참여하였
다. 국회의원과 기자로 구성된 ‘민간’ 참여자들은 전후방 시찰 이
후 군사 문제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전후방시찰에 참가했던 국
회의원 김종순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혔다.

일정시대 병정나갈때에는 그야말로 擧村的으로 擧面的으로 대환송
을 해서 기를 들고 만세를 부르고 이랬었는데 요새는 나가는 형편을
볼 것 같으면 겨우 끌려서 가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으로서 후방 국
민들로서도 사기를 고무시키는 그런 점이 적다 이것입니다. (중략)
좀 더 이것은 강제적으로라도 나가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환송을 해
서 네 뒤에서는 우리가 보아주마 이렇게 좀 해줄수 없을가.

국회의원 김종순은 일제시기 강제동원 병력의 장행회를 언급하
며 한국군의 징병·출진 시에도 후방의 국민들이 군의 사기를 고
무시키는 일에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러한 행사에는
어느 정도 강제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김종순의 생각이었다. 같은
좌담회에서 곽상훈 의원은 전방 시찰에서 살펴본 경험을 언급했
다. 곽상훈은 일선 부대가 식량을 생산하여 자급자족하는 것을 거
론하여, “이것은 특히 후방국민들이 본받을 점”이라고 발화하였
다⁴⁸⁾. 부족한 보급 상황에서 둔전을 짓는 일선 병사의 부가적인
노동이 후방 국민에게 모범으로 제시되었다. 곽상훈은 이어 군인
가족의 생계 문제에 대해 “우리들 후방국민은 일선장병에 대한 은
혜를 좀 더 인식하여서 이러한 문제도 우리들의 힘 닿는 한 노력
하여야 하겠다는 것을 후방국민 여러분에게 호소하는 바입니다”라

48) 「국회의원 전후방 시찰 귀환 좌담회: 후방 훈련소 및 동부전선 편」, 『국방』 21,
1953.01·02 합병호, 27쪽.

고 언급하며,⁴⁹⁾ ‘후방국민’의 노력 동원을 강조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기획된 정훈국 주최 ‘군관민 좌담회’에서도 지방 행정 관료의 입을 빌어 군의 민간에 대한 각성이 촉구되었다. 1953년 3월 대구시의회 의장 김정오는 “군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는 정신적 물질적으로 감당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여 도와드릴 각오이니”라며 군에 대한 협조 의지를 표명하였다. 경상북도 내무국장 이하영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협조 부족의 원인을 두고, “지금까지 원호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은 민간에서 군대를 우리의 군대로 인식하지 않는데 큰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결국 과거 일본군대를 대하는 그런 인식의 잘못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라고 발언하였다.⁵⁰⁾ 이러한 언급은 앞서 살펴본 육해공군합동헌병대장 예관수 대령이나 국회의원 김종순이 일본군이 실시했던 ‘감사’나 ‘위로’ 동원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다만 정훈국 좌담회의 서사구조에서 중요한 점은 군이 직접 나서 민간의 동원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언제나 민간의 각성과 자기비판 형식을 통해 전쟁 수행에 대한 협조가 발신되었다는 점이다.

나. 모성의 국가화와 여성성의 동원

국방부 정훈국은 군·민 좌담회를 통해 전쟁 수행을 위한 논리와 담론을 제시하여 왔다. 상술한 바와 같이 그 서사구조의 요체는 군이 전면에서 나서서 민간의 동원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전쟁 수행에 대한 민간의 협조는 언제나 민간의 각

49) 「국회의원 전후방 시찰 귀환 좌담회: 후방 훈련소 및 동부전선 편」, 『국방』 21, 1953.01·02 합병호, 27~28쪽.

50) 「육군을 말하는 군관민좌담회」, 『국방』 22, 1953.03, 30~31쪽.

성과 자기비판의 형식을 통해 발신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서사 구조는 우연한 것이 아니었다. 군의 대민 요구가 군 측 발화자에 의해 직접 발신될 때 강제 동원의 성격은 두드러지기 마련이다. 좌담회의 기획에서 군의 요구를 대신 매개하고 증폭할 ‘민간 발화자’의 배치가 중요해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 동원의 요구가 민간 스스로의 목소리로 발화될 때, 그것은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 협조의 외형을 획득하게 된다. 이하에서는 민간 발화자의 역할로서 후방의 부인 그리고 부인 이외의 여성에 대하여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1〉 국방부 정훈국·제7사단 주최 ‘전선장병과 후방여성의 좌담회’(1952년 7월 11일)



출처: 「전선장병과 후방여성의 좌담회」, 『국방』 16, 1952.08, 86쪽.

1952년 7월 11일 개최된 ‘전선장병과 후방여성의 좌담회’는 대한

부인회 서울시 간부 13명이 강원도에 주둔한 제7사단을 방문하여 진행된 것이다. 이 좌담회 내용은 『국방』 16호(1952년 8월호)에 실렸다. 이 좌담회는 6·25전쟁 중 후방 부인에 대한 가부장적 여성 동원 논리를 잘 드러내고 있다.

대한부인회 서울시본부 회장 이경임은 우선 “가장이 출정한 집이라든가 가장은 아니라도 생활의 책임을 지던 장남이 출정한 가정은 생활이 곤란하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구호에 힘쓰고 있습니다”라며 후방에 있는 부인회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이경임에 따르면 후방에서 대한부인회는 군인가족 및 유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물론 한글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었다.⁵¹⁾ 이러한 대한부인회의 역할과 대조되어 후방의 민간인 나아가 장교 부인에게까지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경임 회장의 지적은 다음과 같다.

그리고 이것은 군인들과 후방국민과 쌍방에 책임이 있는 문제인데 장교 특히 고급장교의 부인의 지나친 사치입니다. 그렇다고 전부의 고급장교 부인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는 정말 시국을 잊은 듯한 옷차림으로 거리를 다니는데 그 사람들이 모리배나 밀무역업자의 부인이라면 우리는 오히려 문제시 안하겠는데…… 국가의 간성인 장교의 부인이고보니 신경을 쓰게되는군요.⁵²⁾

앞서 살펴보았듯이 전선의 교착 국면에서 후방의 ‘사치’를 비판하고 생활의 통제와 전쟁 의지를 동원하는 서사는 당대에도 이미 상투적인 것이다. 그렇지만 대한부인회 간부 이경임의 언설이 눈길을 끄는 점은 그 비판의 대상이 고급 장교의 부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발화 전략은 두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하나는 정훈 좌담회에 참여하는 ‘민간’ 토론자로서 주최 측인 군과 긴장 관계

51) 「전선장병과 후방여성의 좌담회」, 『국방』 16, 1952.08, 88쪽.

52) 「전선장병과 후방여성의 좌담회」, 『국방』 16, 1952.08, 89쪽.

를 조성한다는 점이다. 좌담회 공간에서 전개되는 이경임은 비판은 좌담회의 서사에 재미를 붙여 넣는 한편, 군에 대한 민간의 불만을 대리 재기하고 해소하는 동시에 봉합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 다른 발화 효과는 민간의 부인이 고급장교 부인에 대한 계도를 담당한다는 점이다. 이는 총력전 수행 과정에서 대한부인회로 대표되는 후방 민간의 자발적 동원 서사를 강조하는 동시에, 여성 내부의 일탈을 다른 여성이 단속하는 구조를 만든다. 결과적으로 대한부인회의 역할은 후방 여성 일반에 대해서는 교육과 구호의 권력으로 행사되는 한편, 군대라는 남성 권력의 핵심부에 가까운 장교부인에 대해서는 윤리적 단속의 역할을 자임하는 것이다. 두 방향은 모두 여성을 통제·동원할 후방의 자원으로 전제하며, 그 균질성을 깨트리는 여성의 일탈을 다른 대한부인회의 여성이 계도·봉합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대한부인회가 전개하는 후방 여성의 능동성은 ‘부인’의 영역에서만 전개되며, 결코 남성 그리고 군인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비판을 제기하지 못한다. 같은 좌담회에 참석한 부사단장 이춘경 대령은 후방의 여성에게 “남편을 위한 자식을 위한 어머니 안해가 되어 달라”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부탁을 했다.

첫째 후방여성에게 부탁드립니다. 세계적 문호 『톨스토이』도 그의 안해의 『히스테리-』가 그의 말년을 비참하게 만드렸으며 『나포레온』도 그의 처의 허영으로 『콜시카』의 고배를 마시지 않았습니까. 최근의 일로 東條의 처 소위 『勝子』부인의 상식을 버서난 일상생활이 東條 자신의 公生活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습니까. 반면 비근한 예로 삼국통일의 명장 김유신 장군의 위대한 업적 뒤에는 그의 힘이 컸으며 사육신 『성삼문』의 안해 굳은 절개는 일찌기 그 어머니의 교훈이 없었든들 (중략) 전선에 있는 우리의 힘만 가지고는 승리를 획득할수 없을것 입니다. 뒤에서 힘차게 미러주는 그 힘이 곧 전승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둘째 부탁은 여러 어머니들이 자식을 생각할 때 내아들로 생각지 말라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맡았던 자식을 이제 는 다-길렀으니 국가에 모두 바친 것으로 생각해 주십시오.⁵³⁾

좌담회에서 부사단장 이춘경이 발화한 후방 여성론은 전쟁 수행을 위한 가부장적 동원 논리가 가장 노골적으로 표현된 경우이다. 이춘경은 톨스토이의 처, 나폴레옹의 처, 도조 히데키(東條英機)의 처 가쓰코(東條勝子)를 부정적 사례로 호명하고, 김유신의 처, 성삼문의 아내와 어머니를 긍정적 사례로 제시한다. 이춘경의 논리에 따르면 김유신과 성삼문의 업적은 아내의 내조와 어머니의 교육에 힘입은 바 큰 것이기도 하였지만, 톨스토이나 나폴레옹의 비참한 말년 역시도 남성 개인의 선택이 아닌 여성의 잘못이 된다. 나아가 일본 군국주의에 대한 비판조차도 도조의 정치적 결단에 따른 책임이 아니라 그의 아내의 ‘일탈’로 돌아간다. 이러한 서사를 통해 남성의 가부장제는 보존되고 비판의 책임은 어머니·아내 등 여성에게 돌아가게 된다.

결론적으로 이춘경이 언설하는 현재 필요로 하는 여성상은 미련 없이 아들을 국가에 바칠 수 있는 어머니이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1952년 10월에 발행된 『국방』 18호의 ‘제2차 육해공군 합동 추도식 유가족 좌담회’는 유가족 어머니상을 통한 전시 민간 동원 양식의 전형을 보여준다. 좌담회는 1952년 9월 28일 부산 육군 제2군인회관에서 ‘9.28 수도 서울 탈환 기념 및 3군합동 추도식’ 직후 개최되었으며, 중앙방송국 녹음을 통해 전국에 전파되었다. 좌담회 참여자는 국방부 차관 김일환과 정훈국 및 일반 장병 그리고 유가족회 5명으로 이루어졌다. 좌담회의 사회 진행은 국방부 정훈국장(제2국장) 임대순 육군 대령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여느

53) 「전선장병과 후방여성의 좌담회」, 『국방』 16, 1952.08, 88쪽.

때와 마찬가지로 좌담회의 지면 게재를 위한 편집은 정훈국이 보았다. 결과적으로 좌담회에 참여한 유가족의 발언권은 유가족회 내 직책의 고하에 따라 차등적으로 주어졌으며, 가장 많은 발언권은 “故 안 준장⁵⁴⁾ 부인”으로 유가족회 부녀부장을 맡고 있는 장옥식에게 주어졌다.

이 좌담회의 핵심은 유가족 측 발화자들이 군이나 정부가 아닌 ‘일반 국민’과 ‘민간 사회단체’를 향해 비판을 발신한다는 점이다. 경기도 유가족 대표 송원섭은 “일반 국민은 아직도 유가족이 무엇인지 또는 전몰장병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자가 있다. 또 소위 애국단체라는 부인회나 청년단체가 한번이라도 유가족을 방문이라도 해 주는 것을 본 일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정부로만은 불가능한 일이니 국민운동으로서 애국단체가 움직여 주어야 할 것으로 믿는다”라고 발언하였다.⁵⁵⁾ 유가족 측이 비판한 표적은 일반 국민과 부인회, 청년단체 등이며, 해법으로 제시된 것은 ‘국민운동’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즉 정부가 책임지지 못하는 영역에 대한 비판이 정부가 아닌 ‘민간 사회단체’와 ‘일반 국민’에게 되돌려지고 있다. 좌담회 사회를 맡은 정훈국장 임대순은 이 발화를 곧바로 흡수하여 정식화하였다. “가난 구제는 나라에서도 못한다고 하는 옛말이 있거니와 정부로서는 제한된 재정으로서 그렇게 심대한 구호사업이란 불가능한 일이다. 이것은 마땅히 사회단체의 활동과 일반 국민의 애국심에 호소하는 수밖에 도리가 없는 것이다”라는 것이었다.⁵⁶⁾

육군본부 인사국장 김용배 준장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54) 안병범(安秉範, 1890-1950)은 대한제국 무관생도로 일본육군사관학교를 거쳐 일본군 대좌에 오른 인물이다. 한국군 창설 당시 58세의 나이로 육군사관학교 제8기를 거쳐 육군 대령으로 임관했다. 6·25전쟁 발발 직후 칼로 자결했고 준장으로 사후 추증되었다.

55) 「제2차 육해공군 합동 추도식 유가족좌담회 녹음」, 『국방』 18, 1952.10, 71쪽.

56) 「제2차 육해공군 합동 추도식 유가족좌담회 녹음」, 『국방』 18, 1952.10, 73쪽.

영령을 위로하는데 전 국민이 결속해서 모두 다 유가족이 된 심정으로 우리의 유가족을 원조하겠다는 것을 맹서해야만 될 것이오. 또한 맹서했을 것이라고 봅니다”라고 국민적 위로를 윤리화하였다.⁵⁷⁾ 유가족회 부녀부장 장옥식의 마무리 발화는 이 회로를 위로부터의 호명이 아닌 ‘아래로부터의 자기서약’으로 봉합한다. “우리는 지금 전쟁이 반도 안끝났고 전쟁은 이제부터 일어날 이런 때에 울고만 있으면 안되겠다. 어떻게 해서라도 늙은 부모와 어린 자식들을 훌륭히 길러서 이 나라에 2세, 3세까지라도 바쳐야 하겠다고 하는 감을 절실히 느꼈읍니다.”⁵⁸⁾ 유가족 대표는 전쟁을 위해 2세, 3세까지 동원의 ‘재생산’ 논하며 좌담회를 마무리하였다.

아들을 국가에 바친 후방 어머니의 서사는 후방에서 벌어지는 군인의 일탈이나 폭력을 감내·옹호하는 가부장적 서사로 이어진다. 가령 좌담회에 참석한 제8사단장 이성가 준장의 좌담회 발언은 다음과 같다.

훈이 아들을 낳면 종와하는데…… 이는 영원히 살수있는 역사를 창조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까닭일 것입니다. 참- 지금세상이야 남녀가 같으니까 非相 남자뿐이 이런 힘을 가진 것도 아니겠지만 (중략) 제가 늘 걱정하는 것은 지각 없는 군인이 있어 후방에 가면 혹 자미 없는 행동을 할가 하는것인데 이런군인을보면 군인이라고 단사람으로 생각지마시고 친자제 같이 생각하여 나무래고 타일러 주십시오.⁵⁹⁾

이성가 준장의 주장에서 흥미로운 것은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역사 인식이다. 이성가는 유보적으로 “남녀가 같[다]”는 전제를 달기는 했지만, 당대의 남성 중심 가부장 질서를 언급·옹호하고 있

57) 「제2차 육해공군 합동 추도식 유가족좌담회 녹음」, 『국방』 18, 1952.10, 73~74쪽.

58) 「제2차 육해공군 합동 추도식 유가족좌담회 녹음」, 『국방』 18, 1952.10, 71~72쪽.

59) 「전선장병과 후방여성의 좌담회」, 『국방』 16, 1952.08, 88쪽.

다. 이성가는 당시 남아 출산을 선호하는 현상이 있다고 전하면서, 그 이유를 남성에게만 “영원히 살 수 있는 역사를 창조하는 힘”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남성에게만 주어졌다는 이 힘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하나는 역사를 창조하는 주체가 오직 남성이라는 가부장적 질서 인식이다. 다른 하나는 그 창조가 죽음을 매개로 해서만 완성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한 남성이라는 개체는 유한한 존재이며, 그가 개체의 유한성을 초극하여 영원한 역사 속에서 살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죽음뿐이기 때문이다.

이성가의 논리에 따르면, 가부장제적 국가의 영원한 질서 속에서 남성은 국가에 바치는 죽음을 매개로 영생할 수 있기에, 죽음을 각오한 남성 군인은 후방 여성들로부터 양해를 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성립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각 없는 군인”이 후방에서 “자미없는 행동”을 하더라도 후방의 어머니는 이 군인을 “친자제”와 같이 여겨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부인회 용산구 군경원호부장 김신희는 다음과 같이 응답한다. “군인이 하는 사소한 일까지 우리는 그것을 비행한다. 횡포한 짓을 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젊은이의 혈기라는 것은 조고만 탈선 쯤 있기 쉬우니까요.”⁶⁰⁾ 이러한 언설을 통해 전시 후방에서 군인에 의해 빚어지는 민간에 대한 실존적 폭력, 전선-후방 간의 전쟁 부양의 구조적 문제, 혹은 남성중심의 가부장제 질서 문제는 개인의 “탈선”으로 축소·봉합되고 만다.

국방부 정훈국 좌담회에서 전쟁을 후방에서 떠받치는 주요 역할로 여성을 지목하고 있다. 앞서 언급된 젠더화한 전쟁 수행 양식이 주로 어머니와 아내의 감내와 희생이었다면, 또 다른 유형은 미혼의 젊은 여성이라 할 수 있다. 이들에게 제시된 것은 위문이

60) 「전선장병과 후방여성의 좌담회」, 『국방』 16, 1952.08, 88~89쪽.

라는 양식이었다.

값비싼 판 물건보다. 그러한 필수품(바늘·실·침·치분·비누·통·콩볶음)이 더욱 고맙지요. 그러나 그런물건보다 정성껏 쓴 편지 특히 여학생의 편지라면 웬만한 위문품에 비할바가 아닙니다.⁶¹⁾

앞서 남성이 역사 속에 영생하는 원리를 설명하였던 이성이 준장은 일선 장병에게 후방의 위문품이 중요함을 역설하였다. 그런데 위문품의 선호 순서는 값비싼 물건도, 생활필수품도 아닌 여학생이 쓴 위문편지였다.

위문편지는 다른 좌담회에서도 언급된다. 종군극작가단이 제2군단을 방문하여 진행된 좌담회에서 전후방의 유대 강화에 대해 논의하던 중 위문편지에 대한 논의가 벌어졌다. 종군극작가단 단원 강성범은 “위문편지가 너무 소박한 것을 보면 성의가 좀 부족한 것 같다”며, 학교나 단체에서 위문편지를 보낼 때 “선생이 고쳐서 보내는 것, 선생이 시켜서 하는 수 없이 써 보내는 것 이런 것들은 오히려 불유쾌”하다고 감상을 밝혔다. 말을 이어 받은 『제일신보』 종군기자 김군서는 보내는 이의 “기명”이나 “성의”가 없으면 위문편지의 효과가 없다고 하였다. 종군극작가단 단원 이진순 역시 가명을 쓰는 위문편지라면 “숫제 안보내는게 낫습니다”라고 단언하였다.⁶²⁾

제2군단에서 벌어진 종군극작가단의 시찰과 좌담회에 대해 군단장 백선엽 중장과 참모장 김웅수 준장은 시종일관 비협조적 자세를 보였다. 각종 위문단이 불필요할 정도로 자주 방문하며 공연비로 지급할 돈도 없으며, 공연 효과도 불분명하다는 것이었다. 이는 정훈국의 좌담회 기획이 군 내부에서도 비협조적·비균질적으

61) 「전선장병과 후방여성의 좌담회」, 『국방』 16, 1952.08, 89쪽.

62) 「종군극작가들의 진중좌담회: 제2군단에서」, 『국방』 17, 1952.09, 81~82쪽.

로 수용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대답이 오가는 와중에 종군극작가 황문평은 일선 부대 장병들의 호응이 “그런데 기생춤을 제일 좋아하는 것 같더라군요. 따라서 그런 것이 좀 와주면 좋겠더군요”⁶³⁾면서 위문단 공연에 기생춤이 들어가면 좋겠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정리하자면, 국방부 정훈국 군·민 좌담회에서 ‘민간 발화자’의 역할이 가장 구체적으로 구현된 장면은 모성과 여성성의 동원 서사였다. 여성은 전투원의 범주에서 가장 먼 곳에 놓인 후방 ‘민간’의 전형으로 표상되었다. 그렇기에 여성의 대답을 빌려 발신되는 헌신과 위문의 언설은 군의 요구로부터 강제의 색채를 지우는 가장 유효한 장치가 될 수 있었다. 좌담회가 아들 혹은 남편을 전선으로 내보내는 어머니와 아내 그리고 장병을 위문하는 여학생의 역할을 반복하여 호명한 것은 이 때문이었다. 이때 어머니의 경우 모성, 기혼 여성의 경우 헌신, 미혼 여학생의 위문은 위문편지로 대표되는 젠더화된 양식으로 구체화되어 있었다. 이 동원 서사는 총력전의 구조와 결부된 문제들, 곧 전시 후방에서 군인에 의해 빚어지는 민간에 대한 실존적 폭력과 전선-후방 간 전쟁 부양의 구조적 문제, 나아가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 질서를 은폐하는 기제이기도 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후방 여성의 헌신과 위문이라는 정서적 실천은 후방 동원의 자원으로 편성되었다.

63) 「종군극작가들의 진중좌담회: 제2군단에서」, 『국방』 17, 1952.09, 83쪽.

4. 맺음말

이 글은 6·25전쟁을 후방에서 수행한 ‘민간’의 의견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그 서사화 과정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군과 민의 의견이 갈등·융합되는 담론장으로 국방부 정훈국 주도의 좌담회에 주목하였다. 이에 6·25전쟁 시기 국방부 정훈국이 기획·주최한 군·민 좌담회를 대상으로, 그 형식적 구성과 발화 구조를 분석하였다.

국방부 정훈국은 중화민국 국민당 政工에서 유래한 ‘정치훈련’ 개념 위에서 창설되었다. 이에 창설 당시부터 한국군 정훈은 군 내부의 정치훈련에 국한하지 않는 민간 사회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를 기획하고 있었다. 이러한 지향은 6·25전쟁 이전 정훈공작대와 정훈세포망의 운용으로 나타났고, 전쟁 발발 이후 정훈대대의 창설과 정훈국 부산분실의 전시 정훈망 조직으로 확장되었다. 1951년 중반 전선이 교착하고 전선과 후방의 구분이 뚜렷해지자 정훈의 대민공작 방법론은 지역 단위 사상·심리전이나 단발성 행사에서 벗어나, 후방 국민을 향한 담론을 기획하는 것으로 이동하였다. 그 대표적 형식이 기관지 『국방』에 게재된 군·민 좌담회였다.

좌담회는 정훈장교가 사회를 맡고 정훈국이 편집을 담당하였으며, 참여한 ‘민간’은 관료·국회의원·언론인·여성단체·유족회 등 군과 밀착한 ‘반관반민’의 인력풀로 구성되었다. 사병의 발언이 지면에 활자화되지 않고 참여 단체의 발언권이 단체 내 직책에 따라 차등 배분되었듯이, 좌담회의 ‘민간’은 철저히 선별·편집된 존재였다. 정훈국은 매 호 호명하는 ‘민’의 유형을 바꾸어 가며 좌담

회를 기획하였다. 때로는 방송을 통해 좌담회 실황을 전국에 전파함으로써 정훈국의 좌담회는 전시 후방 ‘민간’의 의견을 산출·수렴하는 공론장으로 기능하였다.

좌담회 서사 구조의 요체는 국가 주도의 상명하달이 아니라 ‘민간 발화’의 외형을 연출하는 데 있었다. 개전 초 정부와 군의 부재에 대한 민간의 불신은 좌담회 안에서 의도적으로 노출된 뒤, 군측 발화자의 해석을 거쳐 ‘불가피했던 과거’와 ‘미래의 교훈’으로 봉합되었다. 중요한 것은 전쟁 수행을 위한 감내와 원호의 요구가 군에 의해 직접 발신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선 장병에 대한 감사·위로·원호는 물론 징병 환송과 군의 억압에 대한 관용의 요구까지도, 언제나 민간의 각성과 자기비판의 형식을 통해, 곧 민간 스스로의 목소리로 발화되었다. 그 과정에서 아시아·태평양전쟁 당시 일제에 의한 강제동원 캠페인 등이 비교 사례로 소환되기도 하였다. 또한 일제의 전쟁 수행에 협력한 좌담회에 익숙한 인물들이 ‘민간’ 발화자로 배치되었다. 동원의 요구가 민간의 자기서사로 전환될 때, 강제는 자발적 협조의 외형을 획득하였다.

이러한 자기동원의 서사가 가장 구체적으로 구현된 지점은 후방 여성에 대한 젠더 표상화였다. 전투원의 범주에서 가장 먼 곳에 놓인 여성은 후방 ‘민간’의 전형으로 표상되었고, 그렇기에 여성의 담화를 빌려 발신되는 헌신과 위문의 언설은 군의 요구로부터 강제의 색채를 지우는 가장 유효한 장치가 될 수 있었다. 아들을 국가에 바치는 어머니의 모성, 남편을 뒷받침하는 아내의 내조, 장병을 위문하는 여학생의 편지는 각각 젠더화된 동원 양식으로 정식화되었으며, 유가족 좌담회에서 아들과 그의 후손까지 국가에 바치겠다는 ‘아래로부터의 자기서약’이 약조되었다. 반면 전쟁을 지원하는 여성 발화의 능동성은 장교 부인의 사치를 단속하는 여성 내부의 계도에 국한되었고, 군과 남성에 대한 직접 비판은 봉

새되었다. 그 결과 전시 후방에서 군인이 민간에 가한 폭력, 전선-후방 간 전쟁 부양의 경제적 문제, 나아가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 질서에서 일어나는 구조적 폭력은 개인의 ‘탈선’으로 축소·은폐되었다. 요컨대 정훈국의 군·민 좌담회는 후방 ‘민간’의 목소리를 기획·선별·배치함으로써 전쟁 수행을 위한 후방의 지원 논리를 ‘자기동원’의 형식으로 정식화한 담론 장치였다. 이는 총력전으로서의 6·25전쟁이 후방 사회를 전쟁에 결속시킨 방식이 물리적 동원 못지않게 담론의 차원에서도 작동하였음을 보여준다.

이 글은 그간 주목되지 않던 6·25전쟁 시기 한국군의 민간 동원 서사를 복원하여 보았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특히 국방부 정훈국의 조직적 연원을 고찰하며 대민 정치훈련의 양상을 분석하고, 그간 학계에서 주목하지 않던 정훈국 잡지 『국방』을 통해 총력전으로서 6·25전쟁의 수행 담론을 살펴보았다. 다만 좌담회를 위시한 정훈국의 전쟁 수행 담론과 방법론이 일제시기의 총력전 강제동원 논리 혹은 항일독립운동으로서 정훈과 어떠한 연속과 단절을 가지는지 그 연속과 단절을 구체적으로 규명하지는 못하였다. 또한 구체적인 전황의 유불리 및 이승만 정부의 정치적 변화 과정 속에 좌담회 논리를 준별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 부분은 『국방』 결호를 복원하는 한편 각군 혹은 종군작가단 등의 기관지를 교차검증하고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하고자 한다.

〈표 1〉 6·25전쟁 기간 국방부 정훈국 발간 『국방』 게재 군·관·민 좌담회 내역

게재지: 『국방』 3, 1951.05	쪽수: 36-41	제목: 제1선의 군·사단: 정훈부장 좌담회
일시: 1951-04-22 · 장소: 국방부 정훈국 편집과장실		
참여자: 정훈국 차장 겸 정훈감 육군 대령 박영준(朴英俊) · 육본 정훈감실 차감 육군 소령 원충연(元忠淵) · 정훈국 지도과장 육군 소령 이영치(李榮治) · 제1군단 정훈부장 육군 소령 박경도(朴敬都) · 제3군단 정훈부장 육군 소령 정원현(鄭元鉉) · 수도사단 정훈부장 육군 소령 서상호(徐相昊) · 제1사단 정훈부장 육군 소령 이옥섭(李玉涉) · 제5사단 정훈부장 육군 소령 김현기(金鉉奇) · 제7사단 정훈부장 육군 소령 장지환(張知煥) · 제8사단 정훈부장 육군 소령 한희열(韓熙烈) · 제9사단 정훈부장 육군 소령 이용상(李容相) · 제11사단 정훈부장(대리) 육군 소위 김성희(金成會) 정훈 제1대대장 육군 소령 이명흥(李明欽) · 정훈 제2대대장 육군 소령 김병률(金炳律) · 방위국 정훈과장 육군 소령 송성룡(宋成龍) · 정훈국 강릉분실장 육군 소령申明구(申明求) · 정훈국 편집과장 육군 소령 원갑연(元甲淵) · 정훈국 보좌관(사회) 육군 중위 백운길(白雲吉) · 정훈국 고문 마해송(馬海松)		
게재지: 『국방』 4, 1951.06	쪽수: 48-53	제목: 사변1주년 군경관민 좌담회
일시 · 장소: 원자료 기재 없음		
참여자: 육해공군총사령관 육군중장 정일권(丁一權) · 해군총참모장 해군소장 손원일(孫元一) · 공군총참모장 공군소장 김정렬(金貞烈) · 육군참모차장 육군소장 유재흥(劉載興) · 육군본부정훈감 육군대령 박영준(朴英俊) · 육해공군합동헌병대장 육군대령 예관수(芮琯壽) · 육군본부고급부관 육군대령 김천경(金天經) · 헌병사령관보좌관 육군대령 홍순봉(洪淳鳳) · 국회문교사회보과위원장 국회의원 이재학(李在鶴) · 내무부치안국장 김태선(金泰善) · 경상남도지사 양성봉(梁聖奉) · 천주교대구교구장 주교 최덕홍(崔德弘) · 부산시장 김주학(金柱鶴) · 대구시장 허억(許億) · 경상북도공보과장 채문식(蔡文植; 본문 표기 蔡文植) · 영남일보사장 김영보(金泳浦; 본문 표기 金泳보) · 종군문인 마해송(馬海松) · 여류소설가 최정희(崔貞熙) · 정훈국편집과장(사회) 육군소령 원갑연(元甲淵)		

게제지: 『국방』 16, 1952.08	쪽수: 86-89	전선장병과 후방여성의 좌담회
일시: 1952-07-11 20시 · 장소: 보병 제1692부대 사령부		
참여자: 사단장 각하 육군 준장 이성가(李成佳) · 부사단장 각하 육군 대령 이춘경(李春景) · 참모장 육군 대령 김기동(金基東) · 제8연대장 육군 대령 손희선(孫熙善) · 제3연대 부연대장 육군 중령 박주용(朴周用) · 제5연대 부연대장 육군 중령 최원명(崔元明) · 작전참모 육군 중령 진창식(陳昌植) · 인사참모(경 고급부관) 육군 소령 김인걸(金仁杰) · 정훈부 보도과장 육군 중위 김영철(金英哲) · 정훈부 지도과장 육군 중위 홍현창(洪顯昌) · 제3연대 정훈과장 육군 중위 조병시(趙炳詩) · 제5연대 정훈과장 육군 중위 홍림(洪霖) · 제8연대 정훈과장 육군 중위 이희정(李熙正) -사병 제3연대 육군일등중사 박세학(朴世學) · 제5연대 육군일병 정일택(鄭日澤) · 제8연대 육군일등중사 이용만(李容萬) - 대한부인회 측 서울시본부 회장 이경임(李瓊姪) · 서울시본부 부회장 최은희(崔恩喜) · 서울시본부 총무 김설자(金雪子) · 서울시본부 군경원호부장 김룡(金龍) · 서울시본부 재무부장 임영숙(林榮淑) · 서울시본부 선전부장 김소성(金沼成) · 서울시본부 정보부장 곽술희(郭述姬) · 서대문구지부 총무 신덕경(申德卿) · 용산구 군경원호부장 김신희(金信熙) · 성북구지부 부부장 최순향(崔順香) · 궁정동 분회장 박원희(朴元熙) · 동대문구 군경원호부장 이덕순(李德淳) · 청량리 분실 총무 손인자(孫仁子) - 사회 정훈부장 보좌관 육군 중위 이강천(李康天)		
게제지: 『국방』 17, 1952.09	쪽수: 80-84	종군극작가들의 좌담회: 제2군단에서
일시 · 장소: 원자료 기재 없음		
참여자: 제2군단장 백선엽(白善燁) 중장 · 참모장 김웅수(金雄洙) 준장 · 정훈부장 윤봉희(尹奉熾) 소령(사회) · 작가단장 이서구(李瑞求) · 작가단원 이보라(李保羅) · 작가단원 황문평(黃文平) · 작가단원 이진순(李眞淳) · 작가단원 강성범(姜聖範) · 작가단원 조남사(趙南史) · 종군기자 김군서(金君瑞)(第一新報 기자)		

게제지: 『국방』 18, 1952.10	쪽수: 70-74	제2차 육해공군 합동 추도식 유가족 좌담회녹음
일시: 1952-09-28 17:30 · 장소: 부산 육군 제2군인회관 · 녹음: 중앙방송국		
참여자: 국방부 차관 김일환(金一煥) · 국방부 제2국장 육군대령 임대순(任大淳) (사회) · 국방부 제4국장 육군준장 박승훈(朴勝勳) · 육군본부 인사국장 육군준장 김용배(金龍培) · 해군본부 정훈감 해군대령 김건(金鍵) · 유가족회 부녀부장 장옥식(張玉植) (故 安 준장 부인) · 유가족회 부녀부 이화성(李華星) · 유가족 경기도 대표 송원섭(宋元燮) (故 육군하사 宋基天 가친) · 유가족 경북 대표 홍신숙(洪信淑) · 유가족 제주도 대표 강두환(康斗煥) (故 해군삼등병조 康斗旭 伯氏) · 종군 기자 함택운(咸澤雲) · 종군기자 김진섭(金鎭燮) · 기타 약간명		
게제지: 『국방』 21, 1953.01-02합병호	쪽수: 24-44	국회의원 전후방 시찰 귀환 좌담회: 후방훈련소 및 동부전선 편
일시 · 장소: 원자료 기재 없음		
참여자: － 국회의원 측 곽상훈(郭尙勳) · 김문용(金汶鏞) · 김인태(金仁泰) · 김종순(金宗順) · 박승하(朴勝夏) · 윤성순(尹城淳) · 윤재근(尹在根) · 이종영(李鍾榮) · 장건상(張建相) － 국방부 측 김일환(金一煥) － 통신사 측 정국은(鄭國殷) · 원경수(元瓊洙) · 김차영(金次榮) · 함택운(咸澤雲) · 김희종(金喜鍾) (속기자) 장덕근(張惠根) · 정원도(鄭源道)		

게제지: 『국방』 22, 1953.03	쪽수: 20-31, 86	육군을 말하는 군관민좌담회
일시 · 장소: 원자료 기재 없음		
참여자: - 군부 측 육군총참모장 육군대장 백선엽(白善燁) · 육군대학 총장 육군중장 이응준(李應俊) · 육군참모부장 육군소장 신응균(申應均) · 육군정보국장 육군소장 김형일(金炯一) · 육군인사국장 육군준장 김용배(金龍培) · 육군군수국장 육군준장 백선진(白善鎭) · 육군정훈감 육군대령 박영준(朴英俊) · 육군작전과장 육군대령 이용(李龍) · 육 군중군작가단 (사회) 구상(具常) - 민·관 측 경북도의회의장 정재환(鄭載煥) · 대구고등법원부장판사 이종환(李鍾煥) · 경북경 찰국보안과장 고향원(高尚遠) · 경북도내무국장 이하영(李夏榮) · 대구시의회의장 김정오(金正悟) · 대구시장 김종환(金鍾煥) · 영남일보 편집국장 이흥노(李興魯) · 시사신보 편집국장 조약슬(趙若瑟) · 대구매일 편집국원 곽영석(郭錫錫; 본문표기)		
게제지: 『국방』 23, 1953.04	쪽수: 160-169	지리산작전 좌담회: 남부경비사령부 정훈부
일시 · 장소: 원자료 기재 없음		
참여자: - 군부: 남부지구경비사령부 사령관 육군준장 이형근(李亨根) · 정보참모 육군중령 김정숙(金正淑) · 작전참모 육군소령 장태명(張泰明) · 첩보대장 육군소령 박용암(朴龍岩) · 정훈부장 육군소 령 송성룡(宋成龍) (사회) - 경찰 치안국전방사령부 사령관 경무관 신상묵(辛相默) · 경상남도경찰국 국장 경무관 박 병배(朴炳培) · 경상남도경찰국 연락관 총경 김준종(金俊鍾) · 치안국전방사령부 작전참모 총경 이근복(李根復) · 치안국전방사령부 고급부관 경감 박남철(朴南哲) - 민간인 소설가 박계주(朴啓周) · 첩보공작대 대장 안진규(安鎭奎) · 첩보공작대 대원 박구 연(朴九淵) · 첩보공작대 대원 최천주(崔天主) · 과거 인민군 대위 한영관(韓永寬)		

※ 비고: 6·25전쟁 기간 국방부 정훈국이 발간한 『국방』 중 현재 확인 가능한 좌담회 관련 기사가 실린 3호 (1951.5) · 4호(1951.6) · 16호(1952.8) · 17호(1952.9) · 18호(1952.10) · 21호(1953.1 · 2 합병호) · 22호(1953.3) · 23호(1953.4)에 한하여 정리

〈참고문헌〉

－ 자료

『동아일보』, 『부산일보』

국방부 정훈국 편, 『국방』 3·4·16·17·18·21·22·23·25호, 1951~1953

국방부 육군본부 작전교육국 편, 『政工典範(草案)』, 1949

국방부 정훈국 편, 『政訓大系 I』, 국방부, 1956

국방부 정훈국 전사편찬회 편, 『한국전란1년지』, 국방부 정훈국, 1951

국방부 정훈국, 『國防部 政訓局 慶尙南道 戰時 政訓網 組織 企劃書』

민족문제연구소 편, 『친일인명사전』(모바일판)

－ 학위논문 및 단행본

신지영, 「한국 근대의 연설·좌담회 연구: 신체적 담론공간의 형성과 변화」,
연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09

Christopher S. DeRosa, Political Indoctrination in the U.S. Army
from World War II to the Vietnam War,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2006

山室信一, 『複合戦争と総力戦の断層 — 日本にとっての第一次世界大戦』, 人文
書院, 2011

－ 연구논문

강창부, 「6·25전쟁기 「전시생활개선법」과 후방의 ‘생활동원」」, 『민족문화연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20

고낙일, 「6·25전쟁기 공군 정훈 연구: 공군 발행 잡지 『코메트』를 중심으로」,
『동방학지』,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25

공임순, 「최정희의 해방 전/후와 ‘부역’의 젠더 정치」, 『여성문학연구』, 한국여
성문학학회, 2019

김지훈, 「창군기 한국군 정훈의 도입 과정과 중국국민당 정공의 변용」, 『역사와
현실』, 한국역사연구회, 2017

- 김지훈, 「김종문의 총력전 경험과 선전론 형성: 전간기로부터 냉전기까지」, 『상허학보』, 상허학회, 2022
- 나상철, 「6·25전쟁기 노무단의 구성과 활동」, 『군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20
- 나상철, 「한국전쟁기 보국대의 의미와 성격」, 『학림』, 연세대학교 사학연구회, 2020
- 노영기, 「여순사건 이후 군의 정훈 활동과 그 의미」, 『사람』 61, 수선사학회, 2017
- 박연희, 「종군 시문학의 (불)가능성: 양명문과 김종문의 전후 시집을 중심으로」, 『구보학보』, 구보학회, 2021
- 박태일, 「국방부 정훈매체 『국방』의 문예면 연구: 한국전쟁기 정훈문학 연구 2」, 『어문논총』, 한국문학언어학회, 2011
- 박태일, 「전쟁기 국방부 정훈잡지 『국방』의 정훈문학」, 『근대서지』, 근대서지학회, 2013
- 신지영, 「신체적 담론공간을 둘러싼 사건성: 1920년대 연설·강연회에서 1930년대 좌담會로」, 『상허학보』, 상허학회, 2009
- 양영조, 「한국전쟁시 한국노무단(KSC)의 운용과 성격」, 『군사논단』, 한국군사학회, 2008
- 온창일, 「6·25전쟁이 남긴 命題와 課題」, 『군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0
- 유승환, 「잔류파와 도강파의 내적 논리와 ‘공모의 공간’으로서의 고백적 글쓰기」, 『우리어문연구』, 우리어문학회, 2021
- 조미숙, 「일제 강점기 매체에 게재된 좌담회 연구 - 잡지의 만주 담론을 중심으로 -」, 『겨레어문학』 43, 겨레어문학회, 2009

〈Abstract〉

The South Korean Military TI&E Bureau's Roundtables and 'Civilian' Mobilization during the Korean War: Home-Front Relief and Femininity Narratives

Kim, Ji-hoon

(Researcher, Institute of Korean Studies Yonsei University)

Focusing on the military–bureaucracy–civilian roundtable talks (jwadamhoe) planned and organized by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s Troop Information and Education (TI&E) Bureau during the Korean War, this study examines the Korean War as a total war and investigates the logic of mobilizing home–front civilians alongside its narrative construction. To this end, it analyzes Kukbang (National Defense), the official organ of the TI&E Bureau.

The Republic of Korea (ROK) military introduced the TI&E system in response to ideological conflicts between the left and right wings during the establishment of the state and the founding of the armed forces. Modeled after the Chinese Nationalist Party's (Kuomintang) concept of “political work” (zhenggong), ROK military TI&E adopted ideological control over civilian society as its foundational doctrine, positioning itself as a “bridge for military–civilian cooperation” in addition to unifying thought within the military. Control and mobilization of the civilian population were already underway prior to the Korean War, and the outbreak of the war served as a catalyst for their full–scale institutionalization. As the front lines reached a stalemate in mid–1951, the TI&E Bureau

systematically operated civilian roundtables to mobilize and regulate the fighting morale of the home-front populace.

While the discursive format of the roundtable was originally conceived during the colonial period amid expanding publishing capital and mass reading publics, it was repurposed through the Second Sino-Japanese War as imperial Japan's primary mechanism for public opinion control and wartime mobilization. During the Korean War as a total war, roundtables served a comparable function. In the roundtables convened by the ROK TI&E Bureau, “civilians” were selectively curated and edited from a “semi-official, semi-civilian” (ban-gwan ban-min) pool closely aligned with the military—encompassing bureaucrats, national assembly members, journalists, women's organizations, and bereaved family associations.

The crux of the roundtable narrative lay not in overt, top-down state decrees, but in staging the appearance of “civilian enunciation.” Grievances raised by civilians afflicted by the war were deliberately aired and subsequently contained within tropes of an “inevitable past” and “lessons for the future.” Furthermore, demands for civilian sacrifice and home-front relief were never issued directly by the military; rather, they were invariably articulated in the form of civilian self-awakening and self-criticism. When the imperative of mobilization was converted into a civilian self-narrative, coercion assumed the guise of voluntary cooperation.

This narrative of self-mobilization was most concretely materialized in the gendered representation of home-front women. Maternal devotion, a wife's domestic support (naejo), and comforting letters from female students were codified

into gendered modalities of mobilization. Conversely, direct critique of the military and male authority was suppressed, while the structural violence of the home front was reduced to and concealed as individual “deviance.” In sum, the TI&E Bureau’s military–bureaucracy–civilian roundtables functioned as a discursive apparatus that formalized the logic of wartime home–front support into a structure of “self–mobilization.” This demonstrates that total war during the Korean War bound the home front to the war effort through discursive mechanisms just as decisively as through physical mobilization.

Key Words : The Korean War, National Defense, Troop Information and Education (TI&E), Bureau of Troop Information and Education, Roundtable Discussion, War Writers Corps, Total War, Civil–Military Relations

원고투고일 : 2026.07.09. 심사수정일 : 2026.08.27. 게재확정일 : 2026.09.09.